

# 개방과 보호, 갈림길에 선 한국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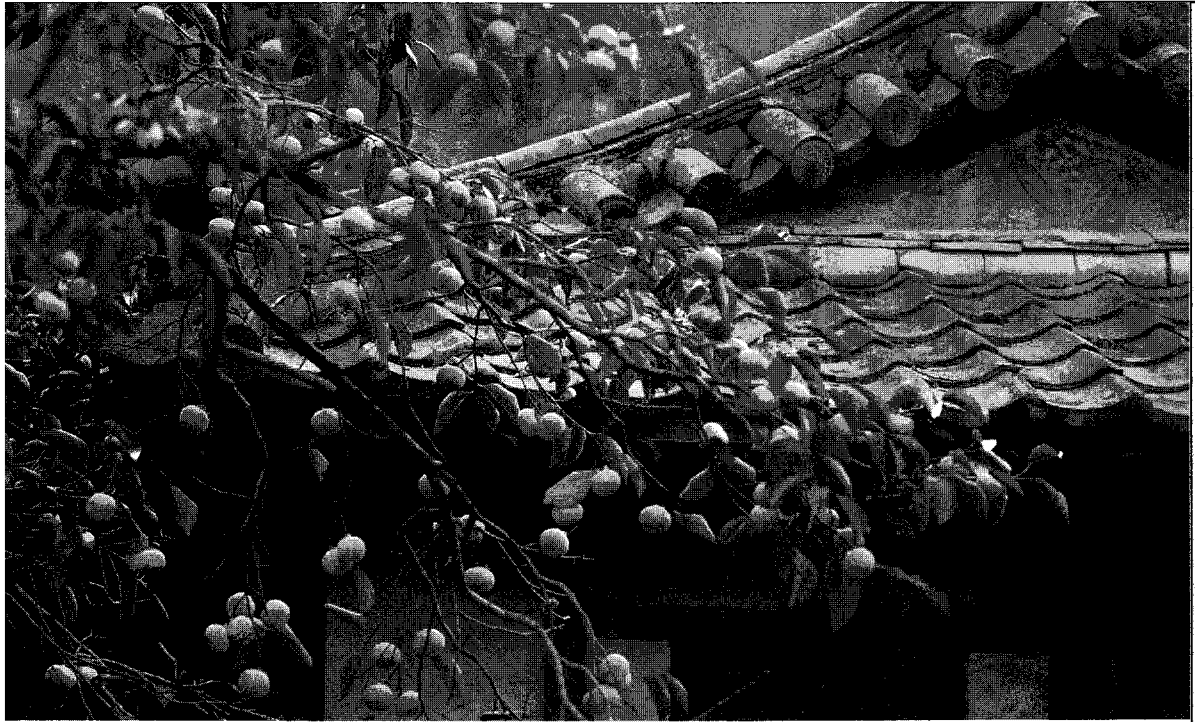
■ 양 승 통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소비와 농정 실패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반면 엄청나게 싼 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은 최근 WTO에 가입으로써 날개를 달았다. 여기에 관세와 국내보조금의 상당 폭(substantial)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WTO의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은 한국 농업이 숨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 최근 미국은 관세상한을 25%로 하는 관세감축안을 제시하여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제안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수입시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품목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일정비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UR 방식에서 벗어나 높은 관세의 품목이 보다 많이 인하되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을 도입하고 획기적인 관세

를 인하하며 둘째, EU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전면 금지 셋째, 허용가능한 직접보조(green box)를 포함하여 국내보조금을 국내생산량의 5%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내보조금 무력화 넷째, 허용가능한 보조인 생산제한하의 국내보조(blux box) 철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출국 입장, 우리에게만 조정부에도 치명적

DDA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의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통과된 2002년도 미농업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미국은 대공황을 겪던 1933년 이래로 미농업법(U.S. Farm Bill)을 통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행할 농업정책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6년 미농업법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상당



부분 도입했던 미국의 농업정책은 1997년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과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자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상당한 지원을 하였고, 2002년도 새 농업법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을 다시 제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농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입국들의 시장을 활짝 열고, 수출경쟁국들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차기 WTO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제안서에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 의회는 미행 정부가 대외 무역협상에 있어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 권한을 부여하여 미행정부의 무역협상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수출보조(우리와 상관없는)를 제외하고는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EU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도 심각한 내용이 된다. 특히 미국은 2년 전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의 쌀 수입에 대해서도 여타 농산물과 같은 수준의 관세로 상당 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여 2004년에 있을 우리의 쌀 수입 추가 자유화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강공에 대해 EU와 일본 농산물 수입국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케언즈 그룹(Keirns Group)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입장은 협상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더라도 상당히 치명적인

## 상상하기 힘든 농업·농촌 없는 미국, 탄산지식 삼아야 가장 강한 협상력은 농업사수 위한 의지, 국민손에 달려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있을 쌀 추가개방에서 관세화를 통하여 개방할 경우, 300%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쌀 산업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하는 관세상한 25%는 우리 쌀 산업의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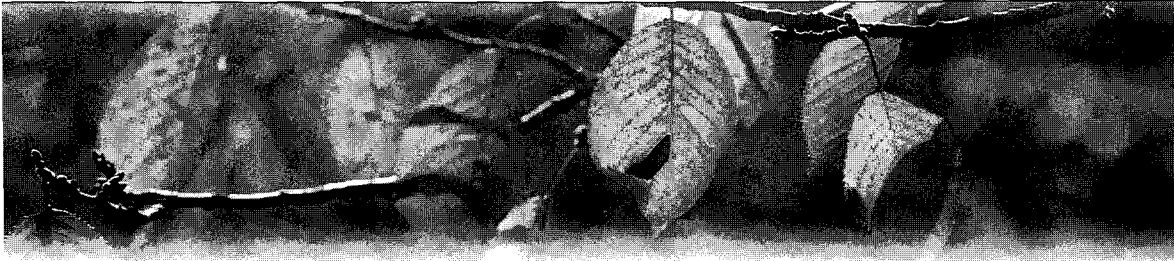
### WTO·무한경쟁 현실, 긍정효과 찾기 어려워

한국 농업은 현재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는 식량 문제를 시장논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관료와, 무역자유화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인데 농업이 발목을 잡는다고 소리 높이는 경제학자들일 것이다. 한국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인 이들은 휴대폰과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농업이 걸림돌이 되며, 오히려 농민들이 다른 분야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다.

과거 UR 협상 때와는 달리 DDA 농업협상의 대표는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본 것과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하다. 마늘협상은 국제무역협상을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의 농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해명에 의하면 마늘분

쟁에 관하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국의 보복철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된 이상 그 외 (세이프가드의 연장 불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고려하는 국민에는 농업부문은 포함되지 않으며, 핸드폰과 폴리에스테ルの 수출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농민을 대립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실로 가장 치명적인 인식이다.

과연 세계화와 자유무역만이 우리의 살길인가? 1995년 출범한 WTO는 분명 국제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간 무역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일본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도 본격적인 침체에 들고 있다. IMF를 겪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전체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이들은 침체에 들어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소리 높인다. 그러나 WTO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부익부 빈익빈 외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녕 누구를 위한 무역자유화인지 의



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 농업가치에 대한 정부이해·국민합의 있어야

무역자유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의 대표격인 미국이 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WTO의 농산물 관련 분쟁에서 EU 다음으로 많은 제소를 당한 이유와 130%가 넘는 양허 관세를 유지하는 농산물이 5개나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왜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의 대표격인 호주와 캐나다가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무역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마케팅보드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논리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번 WTO 협상의 한국대표들은 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공로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그 비시장적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농업을 가진 미국이 농업에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는 이유는 미국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현재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예산을 철폐한다면 많은 수의 미국 농가들은 소수의 기업농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산할 것이며 이는 농촌의 공동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농촌이 미국적

가치와 문화의 출발점이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은 농업과 농촌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는 많은 케언즈 그룹들이 자국의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때도 같은 주장을 할 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에게도 농업의 가치에 관한 정부의 완전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의 공세가 강하더라도 또 우리 정부의 농업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농업을 지켜야겠다는 의지와 양보가 차기 협상의 가장 강력한 협상력이 될 것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업은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태계, 박제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과 조화로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된다. 먹고살기 어렵다고 생명을, 문화를, 지역과 계층 간의 화합을 돈과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1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200년 역사의 미국보다 농업사랑이 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벼랑 끝에 몰린 한국 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이제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 농업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약정보**